

# 공천갈등에 수도권 민심 돌아서고 적전분열로 텃밭까지 내줘

##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분석한 새정치 패인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7·30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으로 지도부의 공천 실패를 꼽았고, 지역민들은 텃밭에만 안주하며 구태와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정치권의 패배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대부분의 호남 의원들은 일부 지역에서 터져나온 공천 논란과 지역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연이은 전략공천 등 지도부의 공천 실패가 패배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텃밭이었던 순천·곡성지역을 새누리당에 넘겨준 '대 이변'도 공천 실패와

함께 지역 정치권의 케케묵은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분열된 지역조직을 한 데 모을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당시 단순 여론조사 결과로 후보를 결정한 탓에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의 일부 측근이 이 의원을 돕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이다. 후보 결정과정에서 당내 '자중지란'도 유권자들의 염증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무소속 구희승 후보는 당내 경선 방식에 대한 불만이 수용되지 않자 독자출마해

## 경선 과정 자중지란 실패

## 지방선거 경고 무시하자

## 호남 민심 결국 '심판' 택해

야권 표를 적잖이 잠식했고, 서갑원 후보와 노관규 전 순천시장 사이의 해묵은 갈등과 반목을 선거 기간 내내 당력을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는 직접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의 이유를 찾기 어려웠

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 관세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권은희 의원의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더구나 광주 광산을 공천을 놓고 기동민 후보를 서울 동작으로 공천하는 등 '둘러막기식' 공천이 전체 재보궐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 초선의원은 "지역구 유권자의 뜻에 부응하는 상황식 공천을 실천해야 야당을 향한 실망감이 줄어들 것"이라며 "야당의 지역적 기반인 호남에서의 공천이 중앙인 수도권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호남 민심은 지난 6·4 지방선거의 전남·북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총 36개 선거구 중 15곳에서 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며 새정치연합에 '경고'를 한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같은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또 다시 안이한 자세로 임하자 지역 유권자들은 이번에는 표심으로 새정치연합을 '심판'했다.

광주 광산울의 경우 유권자들의 '투표 외면'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고, 전남 3곳의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이점형 후보의 당선을 비롯, 나머지

후보들도 18~22%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을 거세게 위협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와 재보선에 임했던 자세를 반성하고, 호남에서 진정한 혁신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가지 선거 후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는 유권자들의 심판이나 다름 없다"면서 "이제는 당내 혁신과 함께 호남의 지역 정치풍토를 바꾸는 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새정치 대혼돈

사퇴·은퇴...박영선 대표 직무대행체제로  
구주류 계파 모임 결론 못내리고 한숨만  
세대교체 바람 일 듯...조기전대 향해 주목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참패로 휘청거리고 있다.

민심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강한 경고장을, 텃밭인 호남에서는 가히 '탄핵' 수준에 가까운 심판을 받으면서 당은 그야말로 대혼돈 상태에 빠졌다.

패배의 책임을 지고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동반 사퇴했다. 더욱이 유력한 대선주자이자 당의 보배였던 손학규 상임고문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충격 받은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한숨소리가 당내에 자욱했다.

더욱이 앞날도 보이지 않는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재창당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지 않는다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승리를 기약하기 어려울텐데 그 길이 어디에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이튿날인 지난 31일 당헌당규에 따라 박영선 원내대표가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는 제1야당의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임시 지휘봉을 잡게 됐지만 앞날은 안개 속이다.

애초 선거에 패배하면 친노(친노무현)·486·정세균계 등 구주류가 공천실패 책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조기전대론'을 공론화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나 손 고문이 정계은퇴를 선언하면서 이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손 고문이 김·안 두 대표의 책임까지 짚어진 모양새이니 친노의 공격은 당분간 이상의 의미를 보이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주류 측에서도 즉각적인 '행동 개시'는 자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정세균계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긴급 조찬회동을 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 있는 당의 일원으로서 부끄럽고 참회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다들 망연자실해 한숨만 내쉬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일각에서 손 고문의 정계은퇴로 세대교체 바람이 당내에 거세게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계파 갈등을 극복하고 당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도 이번 패배를 계기로 당의 모습을 아주 짧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실질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이들을 2016년 총선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당의 최대주주인 친노계가 계파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당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공동대표가 지난 31일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이 31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정계은퇴를 전격 선언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상만 깊어진 4개월...안철수 대표직서 '철수' 대선주자 입지 흔들

7·30 재·보궐선거 참패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년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4개월여 만에 퇴진했다.

지난 201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계에 본격 뛰어들던 안 대표는 이듬해 4월 재보선 당선으로 원내에 입성한 뒤 독자 신당 창당을 준비하며 기존 정치권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안 대표는 지난 3월 민주당과의 통합이라는 정치 인생의 승부수를 던졌다. 2011년 서울시장 후보 양보, 2012년 대

선 포기에 이은 세 번째 '철수정치'라는 안팎의 비판을 뒤로 하고 '제1야당'의 리더라는 거물 정치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긍정적 기대감도 작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안 대표는 정치 지도자로서 역량을 드러내 보이지 못했다.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4월 통합신당 창당 명분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번복하면서 '약속의 정치'가 훼손됐다. 이어 6·4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유능한 광주시장의 전략공천을 강행해

당내 잡음에 휘말렸다.

윤 시장 외에는 자기 사람을 거의 공천하지 못해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재보선에서는 권은희 후보(광주 광산울)와 기동민 후보(서울 동작울)의 전략공천을 주도해 논란을 자초한 데 이어 선거 완패로 정치적 입지마저 사실상 상실했다.

안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선거 결과는 대표들의 책임"이라면서 조기 사의를 표명,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차기 대선을 겨냥한 차분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정국 구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평당원으로 돌아가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당내에서 의신상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난마처럼 얽힌 정치권의 미로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미지수다.

/임용욱기자 tuim@kwangju.co.kr

## 특례보증으로 여러분의 희망을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은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거나 재해를 입었거나 특화보증 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용보증절차를 간소화 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운용되는 보증제도입니다

**KOREG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대상기업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상세 경력자가 없는 경우, 실제 경영자 기준가만 39세 이하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대상기업 제외
보증한도	기초보증 한도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거치 3년 분할상환)
보증료율	연 0.5% 고정
대출기관	우리은행, 기업은행

  

시니어 창업기업 협약보증	
대상기업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상세 경력자가 없는 경우, 실제 경영자 기준가만 40세 이상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이는 1인이 만40세 이상이면 보증대상으로 운용
보증한도	기초보증 금액을 포함하여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3개월 원금등분상환)
보증료율	[보증료 등 운용기준]에 의한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 감면
대출기관	기업은행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대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 영리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보증료율	연 0.5%
대출기관	기업은행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	
대상기업	창업 후 3개월이 경과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 업역상: (제조업) 사업자등록번호 시분 상 계입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 (제조업) 법인등기사항부호중 99 상 계입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 시설자금은 1억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보증료율	연 1% 이내
대출기관	재단과 보증부여선 운용에 관한 협약(유사영칭 포함)을 체결한 금융기관

  

세월호 사고 관련 취약업종 등 지원 특례보증				
구분	Track1 관광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Track2 기타지역 소기업	Track3 특별재난 지역 신속지원	
지원대상	관광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관광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Track1, Track3에 해당하는 관광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관광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경기도 인선시 및 천안남도 천안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			본전 1천만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보증료율	연 0.5% 고정	연 1.0% 고정	연 0.3% 고정	
지원기간	2014. 5. 12 ~ 2014. 8. 12 (3개월 한시적 운용)			
대출기관	재단과 보증부여선 운용에 관한 협약(유사영칭 포함)을 체결한 금융기관			

**신용보증 헤드림 | 신용보증재단**

문의전화 1588-7365 / www.koreg.or.kr